

트럼프 “숙청·혁명” 발언 여진... 美마가·친윤 ‘밀착’ 의혹

일단 오해라고 덮었지만 배경엔 조국가 네트워크 영향력 국내 극우보수진영 美마가와 연대... 각종 행사에 참석 고든창, 트럼프·친윤세력 고리 역할... 부정선거론 공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료 평가를 받은 한미 정상회담과 별개로 회담 직전 한국의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조은석 특검 수사를 “숙청” “혁명”이라고 규정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오해였다”는 발언으로 수습되긴 했지만, 배경에는 미국 ‘마가’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과 한국 내 윤 전 대통령 지지 진영의 밀착 연대가 자리 잡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형성된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백악관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미흡했다는 비판 또한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27일 한미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SNS 파문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서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인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의 고위 채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강훈식 비서실장이 급파돼 와일스 비서실장을 만나 설명했고, 마침 트럼프 대통령의 SNS가 터지자 이를 직접 수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 역할이 잘 맞아떨어져 분위기 반전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숙청·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글을 올린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은 가짜 뉴스가 백악관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연결된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마가 세력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을 불과 세 시간 앞두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숙청 혹은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곳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글을 남겼다. 이어 기자들에게는 “한국 새 정부가 교회를 급습하고, 심지어 미군 기지에서 정보까지 가져



7월17일 서울 은평구 은평제일교회에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설교하고 있다. 탄 교수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온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갔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정상회담 직전의 돌발 상황은 우리 정부를 당혹케 했다. 다행히 회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오해한 것이 확실하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교회 압수수색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여지를 남겼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것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국의 ‘마가’ 진영과

밀착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의 일부 보수 인사는 미국 보수정치단체 행사에 참석하며 줄곧 트럼프 지지 세력과 연대를 모색해 왔다.

트럼프의 발언 배경에는 로라 루머, 고든창, 스티브 배넌 등 미국 보수 인물루어선들의 영향이 자리한다는 후문이다. 그가 운데 고든 창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와 트



럼프를 잇는 가장 강력한 고리로 꼽힌다.

중국 전문 변호사 출신인 그는 2000년대 초부터 ‘중국의 몰락’을 예언하는 등 강경 반중·반북 성향으로 주목받았고, 2010년대 이후 트럼프 지지층에 합류했다. 특히 2018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간첩일 수 있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아 파문을 일으켰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그는 친윤 진영

과 긴밀히 접촉하며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주장을 미국 보수권에 확산시키는 데 주력했다. 15일에는 미국 의회 전문지 ‘더 힐’에 기고해 “이재명 대통령은 맹렬한 반민주주의자이자 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칼럼은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해 대대적으로 인용·확산되며, 트럼프의 발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도 그는 트럼프의 ‘숙청·혁명’ 게시물이 올라온 직후 “트럼프 대통령님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SNS에 남기는 모습을 보였다.

그의 SNS는 결국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내세운 ‘부정선거론’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를 형성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관련 각종 의혹이 미국 마가세력에 의해 인용이 되고, 이를 다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용하는 ‘순환 고리’가 만들어졌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한편, 미국 북음주의 산실인 리버티대의 모스 탄 교수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와 연계 고리로 거론된다. 그는 최근 방한 당시 윤 전 대통령 구속을 비판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범죄로 수감된 적이 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정성호가 경종 울렸다”... 국힘, 與검찰개혁 제동 ‘호재’

‘조바심’ 발언 놓고 “민주당에 사전경고” 주장 鄭 장관 “검찰개혁 왜곡 시도 단호 대처” 해명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검찰 개혁 추진과 관련해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한 정성호(사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정 장관이 극단으로 치닫는 민주당 검찰 개혁에 경종을 울렸다”며 반색하고 나섰다.

각종 개혁입법의 주도권을 더불어민주당에 빼앗겨, 당 분열 양상까지 겪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민주당을 흔들 수 있는 ‘호재’를 만난 셈이다.

정 장관은 앞선 26일 SNS에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어 “정 장관이 민주당의 졸속 검찰 개혁 추진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이재명계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정 장관마저 여당의 무리한 속도전에 우려를 표할 정도”라고 말했다.

또한 “여권 강경파들은 정성호 장관을 향해 ‘역직’ 운운하며 비난하고 나섰다”며 “극단주의에 매몰된 민주당 강경파의 통제되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의 용기 있는 제동은 ‘정청래와 강경파’들이 끌고 가는 고삐 풀린 민주당의 졸속 개혁이 가져올

참담한 결과에 대한 사전 경고”라며 “민주당은 검찰을 폐급으로만 몰아가려는 선동을 중단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장관은 26일 SNS에 올린 글에 대해 논란을 일자 27일 해명글을 올렸다.

그는 “저는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 수사를 수사할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 했다”며 “검찰 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사법은 국민의 삶 그 자체다” 더불어 민주당 국민중심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사법개혁의 중심에 국민을 세우며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한 5대 개혁 과제를 공개했다.

특위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권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경청대회’를 개최하고 대법관 증원, 대법관추천위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혁, 판결문 공개 확대, 강제수사 절차 개선 등 5대 사법개혁 의제를 발표했다.

행사에는 대학생, 청년, 지방의원, 언론인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 대표 8인이 참여해 직접 발언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혜련 위원장은 “그간 사법 개혁은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준의 성과는 미흡했다”며 “이번에는 국민 중심의 실질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 개혁 의제 중 하나인 법관 평가제도 개혁과 관련해 성균관대 학생은 “국민 감정과 괴리된 판결의 원인은 부실한 법관 평가제도에 있다”며 “시민사

대법관 증원 등 민주, 사법개혁 5대 의제 발표

회 추천 인사를 포함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생은 “현행 평가 방식은 폐쇄적”이라며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감정평가(심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법관 증원 역시 핵심 과제로 꼽혔다. 전북대 로스쿨 재학생은 “4인의 대법관으로는 폭증하는 사건을 감당할 수 없다”며 “신속한 판결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30명 수준으로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해 인하대 대학원생은 “헌법상 재판의 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하급심 판결문 대부분은 비

공개”라며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정보 접근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 대표는 “시민단체가 판결을 감시하려 해도 시스템이 미흡하다”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시민 참여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철 인천 구의원은 사법정보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판결문 검색에조차 수수료가 부과되는 현행 시스템은 공공정보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독점하고 사기업에 넘기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날 △대법관추천위 구성의 다양화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 등도 포함한 사법 개혁 결의문을 채택하고 추석 전까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구체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위 관계자는 “오늘의 국민 발언이 단발성 청취에 그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유경 기자 leeyk@skyedaily.com

다 쓴 글도 다시 보자
박병연 지음

25년 경력의 일간지 교열기자가 말하는 글을 고치고 다듬는 기법 공유

박병연 지음 | 338쪽 | 20,000원 | 권오민출판

25년 경력의 일간지 교열기자가 말하는 글을 고치고 다듬는 기법 공유

군더더기 없고 쉽게 읽히는 간결한 문장에서 세이 읽을 때와 비슷한 속도와 난이도 애매한 ‘어문법’ 익히고 싶은 분에게 추천

다
쓴
글
도

다
시
보
자

단순히 말을 문자로 옮기면 글이 된다.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듯이 글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말에 ‘듣는 이(聽者)’가 있듯이 글에도 ‘읽는 이(讀者)’가 있다. 혼잣말을 듣는 이는 자신이며 일기를 읽는 이 역시 자신이다. 실언(失言)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면 실문(失文) 역시 부끄러워해야 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면 쓰는 글이 좋아야 읽는 의미평도 좋을 것이다.

-서문에서-